

고용노동부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 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 (사업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지급
- ☐ (예산/재원) 33,537백만원('21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64,198	-	276,905 (97.2)	33,537	△130,661	△79.6

-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주요 지원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21.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1년 신규자 선정 없이 기존 선정자의 계속 지원만 실시)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2020년 참여자는 총 89,534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6.8%,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8.8%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47.3%(42,374명), 여성은 52.7%(47,160명)로 여성 참여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은 청년 대상이므로 참여자 전원이 청년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89,534 (100)	42,374 (47.3)	47,160 (52.7)	89,495 (100.0)	- (-)	0 (0.0)	0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참여 가능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은 제외 후 참여자 현황 산출

□ (만족도 조사)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접점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청년구직활동지 원금	4.26	4.27	4.30	4.40	4.25	4.28	4.29	4.27	4.27	4.19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고용의 위기 상황극복을 위해 구직단계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추진
 - (국정과제) 국정과제 18-2(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을 배경으로 추진
 - (정책환경) 심각한 청년 실업이라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확정·발표('17.7월)하였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19년 청년구직촉진수당 사업 확대('18.3월, 관계부처합동)
 - (법적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 노력
 - (사업목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고용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구직단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돕기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19년 3월~)
- 일자리사업 성과 측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성과는 알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시간 감소, 구직활동 시간 증가, 경제적 부담 감소로 지원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 발생.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 '20년 총 9.6만 명의 저소득 구직 청년을 지원, 총 2,769억 원 집행 (해당 부처 내부 자료)
 - * 본예산 1,642억 원(5만 명)에 전용 662억 원(2만 명) 및 예비비 545억 원(3만 명) 편성. 당초 5만 명에서 최종 10만 명으로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코로나19로 기업의 채용 연기중단, 일자리 축소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집중되어 긴급 지원.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설('20.9월)
 - * 4차 추경으로 1,0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최종 943억 원 집행. 총 18.5만 명의 구직 청년 지원(해당 부처 내부 자료)

-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업 계획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 추진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나,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에 관한 모니터링이 아쉬움
 - 구직활동 이외 용도 사항, 사용처 검증 부실 등 예산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수급자의 사용 제한 장치 마련, 클린카드 방식 운영으로 사행성, 자산형성 관련 업종 사용 제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참여자 자격조건을 완화, 지원금 유예조건을 완화
 - 오프라인 사업설명이 취소되면서 온라인시스템에서 대부분 교육이 이루어져 전달력 감소와 참여자의 집중도가 낮아져 보고서 심사 시 부적격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사업의 질이 저하된 측면
- 제도개선 노력 측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운영에 환류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시행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10월로 사업이 종료됨. '20년까지 신규대상자 선정하고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통합
 - 청년 취약계층을 얼마나 잘 포괄하였는지, 지원 금액과 기간 등 서비스 제공이 적절한지,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취업프로그램 연계 등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